

ISSUE & FOCUS

Newsletter 2015-2 | FEBRUARY 2015

‘13월의 세금’ 논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복지의 함정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2014년도 소득 연말정산과정에서 일부 근로소득계층의 세금이 늘어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 ‘13월의 급여’ 또는 ‘보너스’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너스는커녕 오히려 돈을 더 물어내야 할 판국이 되니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논란, 무상복지 확대의 부메랑

연말정산이란 급여(給與)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稅額)을 연말에 가서 많이

내고 적게 낸 것을 따져 정산하는 것이다. 매월 꼬박꼬박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득을 합하고 또한 그동안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낸 것을 가려 더 낸 사람에게는 세금을 되돌려주고, 덜 낸 사람에게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것은 기존의 공제항목을 조정하거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세율이 올라가서 세금부담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세제의 합리화 과정에서 일부 계층에 조세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이렇듯 세금은 매우 예민한 것이다.

사실 연말정산 논란의 이면에는 증세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확대 등 복지수요 증대가 있다. 무상복지 확대로 재정수요가 증가하자 증세논란으로 부메랑 되어 돌아온 것이다. 사실 우리의 재정 상황으로는 현재의 복지정책도 유지하기 힘들다. 지난해 누리과정에서 그 실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 재정 부족분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했고, 또 다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고의 우회 지원을 통해 고비를 넘겼다. 누리과정이 예산부족의 문제라면, 최근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폭행 사건은 운영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 이면에는 무상복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무상복지 수혜자는 자기 돈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심이 낮다. 반면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학부모의 관심이 낮고, 정부가 주는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수익을 올리려는 생각을 한다. 윤리적으로 무상복지에 쓰는 돈을 아껴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공짜라는 생각 때문이다.

세금과 복지 포퓰리즘

우리들에게는 자기 부담은 최소화하고 받을 혜택은 극대화하려는 심리가 있다. 세금은 덜 내고 국가 혜택은 많이 받으려는 것도 이런 심리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받기 위해선 그만큼 부담을 해야 한다.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는 많이 받으려 한다면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겠는가? 초기엔 그럭저럭 복지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도 결국 세금을 내는 수준만큼 복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는 많이 받으려 한다.

정치인들의 이기적 행동이 이런 심리를 더 부추기고 있다. 결국 무상복지 확대는 국민들의 욕구와 정치인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맞아 떨어져 생겨난 것이다. 정치인들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미래의 문제보다는 항상 선거에 이기는 것을 우선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구미에 맞는 공약을 발표한다. 유권자 역시 장기적인 관점보다 단기적인 이익에 관심이 커 이들의 공약에 쉽게 현혹된다. 이러다보니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재정은 악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해 세금징수 결손이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복지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재차 강조하면 바람직한 복지는 세금을 내는 만큼 받는 것이다.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하세원의 양성화와 재정지출 합리화를 통해 일부 복지재원은 충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진 역부족이다. 실례를 우리는 이미 지난 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에서 봤다. 무상급식으로 당장 보수가 필요한 학교시설물을 제 때 정비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이제부터라도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복지수준을 재정상황에 맞게 낮춰야 한다.

재정상황에 부응한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바람직한 복지는 공동체의식 제고와 고용을 유발하는 산업구조개혁 그리고 교육-고용-복지의 삼각 안정망의 구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이의 실현 여부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에 달려 있다. 1차적으로 개개인이 일을 통해 스스로의 복지 기반을 다지는 노동복지, 가족공동체의 복원을 통한 가족복지의 활성화, 그리고 기업복지의 확대다. 다음으로 고려할 것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최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려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다. 선택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냐의 논쟁을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나라나 보편복지는 이상(理想)이다. 또 그 방향으로 가는 노력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

들의 증세에 대한 저항 등 현실적 한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솔직해야 한다.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려 이해를 구한 뒤에 현재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을 비롯한 복지제도와 지출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 목적은 현재의 재정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복지제도의 운영이다. 집행의 효율화 문제도 있다. 먼저 중복 수령과 집행의 비효율 분야를 찾고 고쳐서 복지예산의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받을 사람이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과 저소득 사업자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기초연금 또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어느 세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